

“통합 힘으로 현안 해결…압도적 성장 이끌겠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취임 100 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진전…국립의대 목은과제 해결 반도체 산단·AI·재생에너지 등 지역 미래성장 동력 확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통합 출범 100일을 맞아 전남광주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놴다.

군공항 이전과 국립의대 등 장기간 담보했던 현안을 통합의 힘으로 풀어내는 한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투자를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민 시장은 지난 8일 광주청사 비즈니스

룸에서 열린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통합은 옳은 선택이었다”며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의 힘을 시민 모두의 삶으로 돌려드리는 ‘함께 사는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로는 광주·전남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을 꼽았다. 군공항 이전은 이전 후보지 선정까지 진전됐고, 무안 국가산단 등 지역의 미래산업을 함께 키울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의대 설립도 지역 의료체계를 재편하는 계기로 평가했다. 동부와 서부가 각각 필요한 의료 기능을 갖추면서 서로 연결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서남권 산업 발전과 연계하는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민 시장은 특히 통합의 힘이 기업 투자와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 추가 투자 과정에서 폐수처리 문제가 발생하자 특별시와 장성군이 신속하게 대응했고, 출범 이후 첫 국가공모 사업으로 양자클러스터를 유치했다고 말했다.

광양만권 아차전지 특화단지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645만평 규모의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기업 투자만 약 10조원에 달하는 만큼 원료와 소재,

재활용을 잇는 배터리 공급망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통합 성과도 제시했다. 취임 첫날 결재한 ‘통합 100일 실행계획’의 8개 과제 가운데 지역화폐 특별할인, 광역버스 운행, 응급의료 통합플랫폼은 실행에 들어갔다. 조례 정비와 공공기관 통합, 균형발전기금 설치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별로 나뉘었던 노인복지타운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찾아가는 행복버스 등의 서비스 이용 범위를 넓히고 일자리·청년·관광 분야 정보와 서비스도 연계하고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 시장은 향후 시정의 핵심 과제로 ‘공개와 공정’을 제시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두고는 종합단에서 공정관리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일정 지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를 드러냈으니 이제 바로 잡겠다”며 “사업 진행 상황을 시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필요한 추진체계는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지역 성장의 중심에는 반도체를 놓았다. 민 시장은 삼성·SK·애플의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거론하며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력과 용수, 도로·교통뿐 아니라 주거와 교육·의료까지 한꺼번에 갖춰 기업과 인재, 가족이 함께 정착하는 산업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AI와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첨단소재를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연결하고 석유화학·자동차·가전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첨단기술을 접목

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놴다.

민 시장은 “전남광주의 압도적 성장이 모든 변화의 목적”이라며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만들고 성과를 일자리와 소득으로 돌려주는 지역주도성장을 전남광주에서 가장 힘 있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과정에서의 제도적 한계도 짚었다. 특별법에 담긴 공무원의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이 조직 관리와 운영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 때 우선적으로 손질해야 할 조항으로 꼽았다.

민 시장은 “100일 동안 시작한 변화를 제도와 시민의 삶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320만 시민이 통합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소흥 기자 photo25@



화려한 퍼포먼스 펼치는 충장축제 거리퍼레이드 참가팀 10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제23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거리퍼레이드에서 일본 참가팀이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민형배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 불합리”

통합특별법 1호 개정 시사

3개 청사 기능배치와 충돌

예외적 이동 제한 방식 제안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공무원의 근무지를 옛 광주시와 전남도 관할구역으로 보장하도록 한 통합특별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 근무지를 일률적으로 보장하는 대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자는 게 민 시장의 입장이다.

이는 광주·무안·동부 등 3개 청사를 기능별로 운영하는 통합특별시의 조직체계와 기존 근무지 보장 규정이 맞지 않아 인사와 조직 운영에 제약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민 시장은 지난 8일 광주청사에서 열린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이 조직 관리·운영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 “특별법을 바꿀 때 1순위로 개정해야 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통합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이 기존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통합특별시는 이 조항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지 변경을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에 의존해야 한다. 광주·무안·동부청사

에 업무 기능을 재배치하고 중복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인력 배치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 시장은 조항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법률로 근무지 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식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직자들도 개인 생활이 있기 때문에 생활권을 무시하고 인사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원천적으로 법에서 막아놓는 것은 남비와 소모적인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개정 방향으로는 근무지 이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예외를 두는 방식의 전환을 제시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존 근무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통합특별시는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에서 4실·8본부·28국·148개 처·과로 근무지 보장 규정이 맞지 않아 인사와 조직 운영에 제약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민 시장은 “통합특별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조직과 인사 운영도 통합 취지에 맞게 작동해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소흥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광주, 초중 서·논술형 평가 단계적 도입으로 전환

“준비된 학교·과목부터” 초5~6·중1 100% 도입서 선회 광주청사, 신창동 이전·광산지원청과 공동 이용 방안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내년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는 서·논술형 평가 전면 도입 계획을 단계적·부분 도입으로 전환한다.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객관식을 줄이고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한다는 방향성은 유지하되, 학교와 과목별 여건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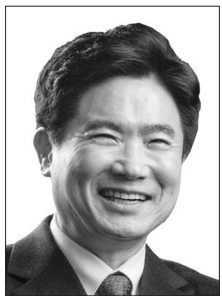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사진)은 지난 8일 통합교육청 광주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논술형 평가를 학교와 과목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사고력을 높이는 미래 인

재 양성을 위해 평가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크지만, 학부모 혼란과 교사 업무 부담 등 현장의 우려도 컸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토대로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교육청은 당초 2027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평가에서 객관식 문항을 없애고 서·논술형 평가를 100%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률적인 전면 시행보다는 준비가 된 학교와 과목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그동안 일률적인 전면 시행에 반대하며 정책 재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을 요구해 왔다. 교사들은 교과 특성과 교육 내용에 맞는 평가 방식이 필요하



다며 단계적인 비율 확대와 시범학교 운영 등을 제안했다.

통합교육청은 교사들이 새로운 평가 방식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학교별 준비 정도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도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AI 에듀테크 채점 시스템 활용 등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인 도입 범위와 단계별 시행 기준은 현재 논의 중이며, 통합교육청은 다음주께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통합교육청 출범 100일을 맞아 청사 이전과 조직 개편 계획도 유력을 드러냈다. 노후·협소한 광주청사는 예정대로 광산구 신창동 부지로 이전하고, 신설을

추진 중인 광산교육지원청과 공간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남광주 동부권에는 통합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동부교육청을 신설하고, 기존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 지원에 집중하도록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모두 세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쳐 통합교육청의 효율적인 조직·청사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통합에 따른 정부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원 가운데 연 1조원을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재정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일자리 투자만큼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 것이 20조원 재원의 목표”라며 “새로운 일자리에 지역 아이들이 들어갈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전남광주특별시, 기반시설 확보·투자환경 조성 지원

▶1면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 중에는 SK의 경우 용인 클러스터 조성 이후로 ‘광주 사업’을 미루거나 글로벌 반도체 경기 상황에 따라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최 회장의 광주방문으로 이같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SK그룹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투자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들과 10차례 협의를 진행해 투자 수요와 필요한 지원 사항

를 논의했다.

부지와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특별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6조원 규모의 통합재정 지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 수요에 맞춰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고, 정부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와 투자 환경 조성을 뒷

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민형배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신 최태원 회장”이라며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장을 최적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건설·운영할 수 있도록 부지·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은 물론 인재 양성

▶1면 ‘농어촌 기본소득’서 계속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곳을 대상으로 11월 공모를 진행한 뒤 12월 사업 대상지 18곳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시는 이 결과를 반영해 자체 지원 대상과 사업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관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군이 늘어날수록 자체 사업에 투입해야 할 지방비는 줄어든다. 반대로 선정 지역이 적으면 통합시와 군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진다.

현재 통합시는 12개 군 가운데 4개 군이 추가 선정되는 경우를 가정해 사업비를 추산했다. 나머지 8개 군에 자체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83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12개 군 모두를 자체 사업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1211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재원은 통합시와 해당 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개 군 지원에 832억원이 들어간다면 통합시

가 416억원을, 해당 군들이 나머지 416억원을 나눠 부담하게 된다.

기존 정부 시범사업과 비교하면 지방정부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 1차 사업은 국비 40%, 통합시비 30%, 군비 30%로 재원을 구성했다. 2차 사업은 국비 비중이 50%로 높아지면서 통합시와 군의 부담이 각각 25%로 낮아졌다. 자체 사업에서는 이 같은 국비 지원 없이 사업비 전액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자급 범위 확대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려면 해당 군과의 재정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통합시가 제시한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

통합시는 다음 주 12개 군의 재정 담당자와 농정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지원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민형배 시장은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2028년 전면 시행한다면 통합특별시가 내년 1년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재정 부담과 시행 방식은 해당 군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